

# 行政電算網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郭 治 瑞 데이터통신 행정전산사업단장·상무

##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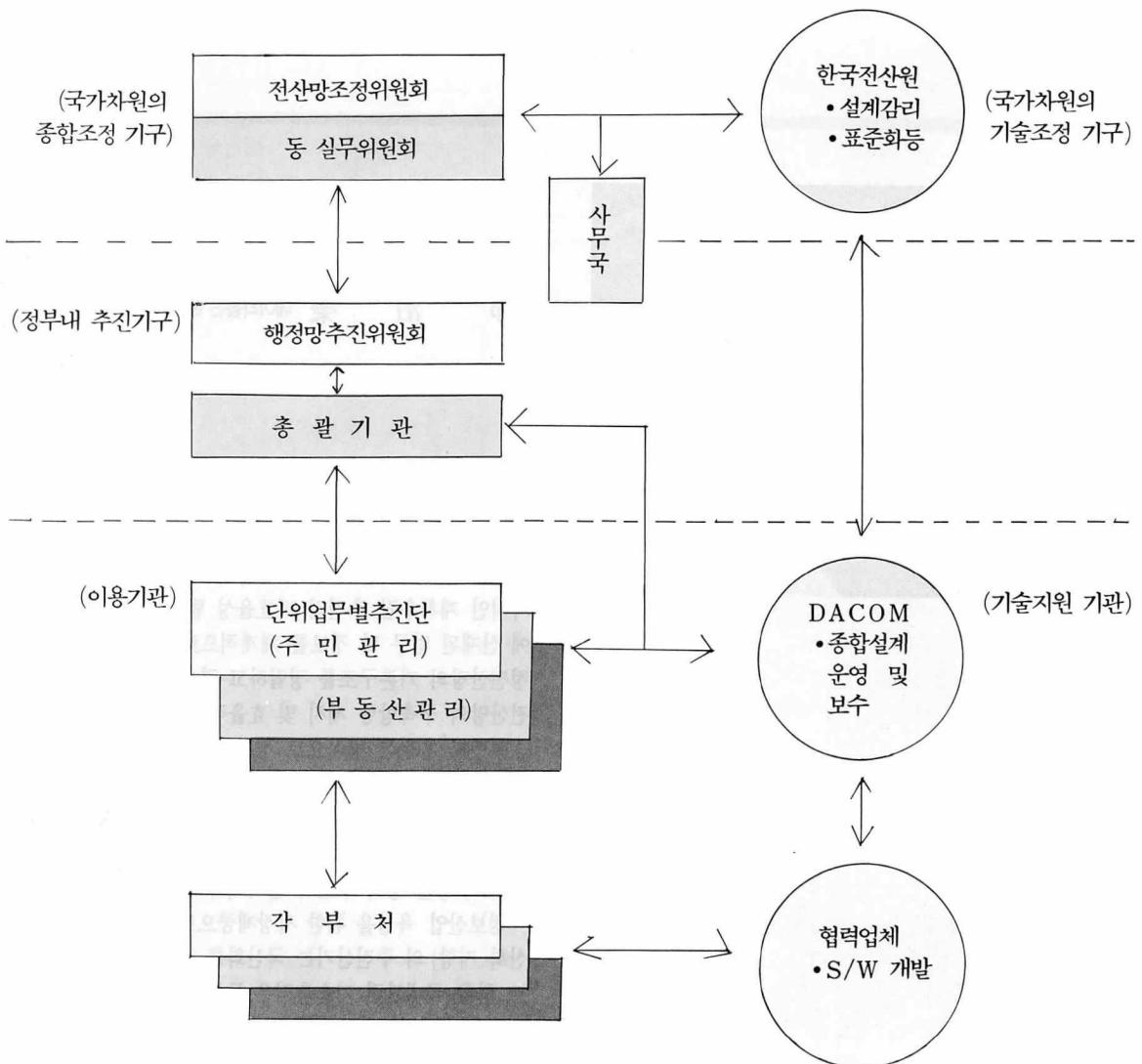
전문기관에 의한 일괄 추진체제로서 종전의 부처별 독자적인 계획수립 추진의 비효율성 탈피,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업무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행정전산망의 기본구조를 정립하고 경제적이고 안정된 행정전산망의 구축방향 제시 및 효율적인 추진을 한다.

선투자 후정산 방식으로 정부의 연간 전산화사업에 대한 투자는 약 400억원 규모로 신규사업에 대한 한 투자가 곤란(우선추진사업 : 약 1,500억원 소요) 하며 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인원 등 실제 동원을 고려, 선투자 후정산 방식 추진이 불가피하다.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제공으로 하드웨어 분야(국산화 지향)의 주전산기는 국산화를 감안한 기종 사용으로 향후 국내관련 기술축적은 물론 주전산기업계 수요를 유발하며 다기능사무기기 분야는 이미 국가표준사양을 공개하여 국내 PC 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본체 : 14개기종, 프린터 : 5개기종). 소프트웨어 분야는 개발방법론의 표준화로 유지보수의 용이성 확보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적극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FM(Facility Management) 방식에 의한 One-Stop-SVC으로 일반 용역개발의 비효율성을 탈피(개발과 운영의 이원화) 하여 개발 및 운영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의 책임체제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한다.

## 행정전산망 추진 체계



## 정보산업계와 연계추진

행정전산망의 추진 체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보산업계와 연계추진하는 점이다.

안정적인 H/W 시장 제공 및 기종 표준화를 위해 주전 산기 국산화 개발을 유도하는데 5년('87-'91)간 335억원 규모(ETRI 주도, 4개회사참여)의 국산화개발품을 행정

전산망용 주기종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전산기 국산화 개발을 유도하고, 16비트급 PCXT 기종 기준으로 본체14개 기종, 프린터 5개 기종 채택하였으며 5년('87-'91)간 약 199억5천만원(9,500대상당)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 기타 한글처리(2바이트 완성형), 워드프로세서, 애뮬레이션 S/W 등 표준화 추진으로 기종간 호환성을 유지하고 네트워크센트레이터(N.C) (5년간 400여대), 리모트 패

드(5년간 1,800여대), 모뎀(5년간 15,000여대) 등의 통신장비 국산화를 추진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S/W 하우스의 참여와 표준개발방법론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데 S/W 시장제공(24 억원, 177명규모), 행정전산망 표준방법론 및 개발기법인 PROMPT 와 LSDM 의 보급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 행정전산망의 개발·구축상의 특징

행정전산망은 사업기간이 길며 대규모 사업이고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다. 우선 추진사업이 정책적 관점에서 먼저 설정, 후추진됨으로써 관련 각 부처 특히 실무부처가 수용태세를 갖추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성격별 목적과 업무한계가 상이한 각 부처의 업무관계를 조정수용(전담사업자와의 직접 접촉창구 20개 이상)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비교적 긴 라이프 사이클이 소요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서 기술적인 표준, H/W의 미비 뿐만 아니라 관련법, 제도, 등에 미비된 상태에서 모든 기반구조를 개척적으로 구축함에 따른 추가적 시간, 경비의 소요가 요구되고 있다.

## 실질적인 추진체제 보완

‘87들이 국가차원의 종합 또는 기술 조정기구, 정부내 추진기구가 구성되어 행정전산망 사업체계 Top Level의 의사결정 구조가 명시 됨으로써 일단 기본적인 추진체계는 완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실무적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전산망사업 전체에 대한 절차규정이 준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추진에 있어 어려운 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직도 사용기간, 총괄기간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공동적으로 이해하는 절차,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규정화 될 필요가 있다.

## 전담사업자에 대한 사업성 확보기반 구축

행정전산망 사업의 강점은 전문가집단인 전담사업자에 의한 일괄추진체제에 있으며, 본 사업의 강력한 추진력도 전담사업자에 의한 선투자 방식을 빼놓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강점도 전담사업자에 대해 사업

성이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는 유지되지 않으며, 행정전산망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성 보장은 선투자 자금의 완전한 회수로만 가능하다.

전담사업자의 선투자 자금은 주로 한국통신진흥(주)로부터 차입하여 투자한 후 이용단계에서 중앙정부 또는 사용자로부터 장기분할 방식으로 회수하여 변제토록되어 있다.

최근 행정전산망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보다 단순화하여 사업자의 투자원가를 일정기간 분할상환 함으로써 사용자의 소유시설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중요한 것은 투하원가를 누군가가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담사업자의 투하금액이 전액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미리 전담사업자와 정부 및 감정자간에 합의된 표준을 정해두고 사업자는 이 표준범위내에서 집행토록 하면, 그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선투자는 부분적으로 회수불능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방향으로는 한국전산원에 의한 사전감리를 통해 전담사업자의 향후 사업을 확정시켜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 사업의 계속성 확보

행정전산망사업의 전략적인 강점은 선투자 후정산방식에 의해 정부공무원의 전산화 필요인식에서부터 실행에 옮기기 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선투자 방식이 진정한 의미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가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이어지게끔하는 매카니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7개 업무에 국한되어 있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각 부처의 전산화 욕구를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조치는 아직 미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담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우선추진 7개업무 이외의 신규업무 수행의 기회를 증대시켜, 기존에 확보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전산망차원에서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얻을 수 있도록 대처함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정부측의 적절한 대책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위와같은 연결작업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미리 승인해 두되 새로운 수요를 융통

성있게 수용할 수 있는 정책 표명 및 절차 제정이 필요하다.

### One-Stop 서비스 체제 확보

행정전산망 시스템에 있어 사용자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미의 One-Stop 서비스 체제확립이 관건이므로 사용자에 대해 시스템의 모든 고장 및 장애사항을 전담사업자가 파악하여 전담사업자가 일괄적인 유지·보수체제를 확보함이 필수적이다.

한편, 최근 조정위 심의·의결사항 중 전산본부 설치 및 운영계획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One-Stop 서비스의 개념하에 다음과 같은 “전산본부 관리운용분담 기준”을 그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동 기준에 의한 실제적인 운영시에는 보다 세심한 체계구축과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그 운영 및 관리상 미묘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관리는 관계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부득이 현재와 같이 전술된 방침하에서 각 설비나 기기별로 그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부분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영 및 유지·보수상의 각 경로별·단계별 경계부분에 공백 및 중복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밀한 절차규정의 확립이 요청된다.

### 부처간 자료 공동활용 기반구축

행정전산망의 근본적인 목적은 행정부내 각 부처의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행정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상 각 부처별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가 이동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별도의 하위규정에 위임(동법 제 14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관련되는 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정보유통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데이터 코드는 각 부처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원활하게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으로 통일되어 할 분야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일부 데이터 코드의 경우에는 국가 표준으로 제정된 코드에 적합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의 공동활

용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7개 업무 이외에도 정부 부처의 제반 업무에서 통일된 데이터 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코드 표준화에 관한 대책을 제도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사용자의 불안감 해소

모든 전산화 사업에 공통적인 문제점은 어떻게하여 사용자측의 신뢰를 얻어 최대한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느냐 하는 것이다. 행정전산망 사업에도 이와같은 과제가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은 상당히 완화된 상태라고 하나 앞으로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행정전산망에 있어서 사용자측의 불안감은 2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사용부처의 전산직 공무원의 불안이고, 둘째는 사용부처의 주무부서 공무원의 불안이다.

이상의 사용자측의 불안해소는 전산망 사업의 성과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이를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자를 사업추진에 가능한 한 깊이 동참시켜 지속적인 대화 및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 정보산업계의 이해관계 조화와 협력

이미 언급했듯이 행정전산망 사업의 주요 목적이 국내 정보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인 바, 여기에는 정부, 업계, 전담사업자 3자간의 격의없는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여기서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대다수의 S/W 및 H/W 업체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업계는 본사업에 대한 의의를 직접적인 참여에만 주지를 말고 보다 거시적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와 전담사업자는 가급적 다수업체가 본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특히 입찰방식에 있어서 지나치게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나아가서는 법규상으로 공정한 원가보상이 가능한 방법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